

어르신들의 삶이 연극이 된다

서울시 '노인 이야기집' 사업 추진 청년 예술가, 창작활동으로 연결 단막극, 에세이, 판화등으로 제작

서울시가 노인의 삶에 청년이 예술로 공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예술가들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술 활동으로 연결하는 '노인 이야기집' 사업을 벌인다.

세대 간 협력 활동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창출, 노인 삶의 가치를 의미화하고 새내기 예술가들이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노인 이야기집은 70세 이상의 노인과 청년 예술가 인터뷰를 진행해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억 64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운영단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 이내 노인과 관련된 예술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그 대상이다.

운영단체는 노인과 청년 예술인 밀집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공간 활용 가능성,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해 사업 지속 가능성이 높은 3개 자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구를 선정한다.

이어 커뮤니티 아트 등의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청년예술가 30명을 공모하고 지역·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억과 경험을 가진 70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모집한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영단체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열고 지역 내 기반시설(주민센터, 노인정)과 협력해 노인과의 관계 형성에 나선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예술가들은 사례발표와 토론, 예술 작업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운영단체는 밥상 나눔, 소일거리 공

동작업, 산책과 같은 일상 활동 공유를 지원하고 전체모임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어르신들의 구술을 채록한다.

청년 예술가들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퍼포먼스(단막극, 즉흥극), 에세이, 판화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친다. 운영단체는 창작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작품을 아카이빙 한다. 시는 이달 중 운영단체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협력 활동을 통해 노인과 청년 세대 간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노인의 자존감 및 삶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시민체감 기술발굴 '서울혁신챌린지'

팀당 2000만원 32개팀에 지원 최종선정된 16개 팀에 최대 2억

서울시는 시민의 아이디어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발굴 대회 '제4회 서울혁신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혁신챌린지는 빅데이터 분석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간(O2O) 협업서비스, 인공지능 잇몸 질환 관리 플랫폼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대회는 총 9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인 '네트워킹 데이(5월)' 등을 통해 전문 멘토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팀을 꾸리게 된다. 시는 예선평가(7월)를 통과한 32개 팀에 시제품 개발비로 팀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12월 결산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16개 팀에는 1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시민과 예비창업자, 대학, 중소기업(외국인 포함)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내달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4회 서울혁신챌린지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시는 SAP(글로벌 최대 ERP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LG CNS, 현대자동차 등과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기술후원사 추가 유치를 통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3년간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발굴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1047개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과태료

수도권 전역서 5등급 차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기간에 매연저감장치 폐차 지원 등 저공해사업 대폭 확대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각 관내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이듬해 3월)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공동으로 제한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 단속 등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2만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저공해 차를 사면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내 전역에서 이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즉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시내버스 임금인상률 2.8% 타결

운수종사자 직업 만족 향상 대안 마련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2.8%(2020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로 타결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 10년 간 시내버스 임금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

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고지·차량 방역, 운전원 건강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노·사는 운수종사자 후생복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연수 프

로그램 다변화 등을 추진, 운수종사자의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노사가 스스로 감내하는 자세로 임금협상을 조기타결 해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노·사 협력 모델을 토대로 준공영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마스크 구매 관련 피해상담 통계>

인터넷 쇼핑물 유형	접수건수	비율	주요 피해내용
오픈마켓	238	25.1%	배송지연, 일방적 구매취소 후 환불
소셜커머스	228	24.1%	
일반 인터넷쇼핑몰	169	17.8%	
사기의심 사이트 (해외사이트 및 SNS 등)	313	33%	결제 후 연락두절
합계	948	100%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마스크 결제하니 잠적"... 사기 900건 넘어

#. 소비자 A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1장당 2000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알림피드를 보고 100장 가격인 2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열흘이 지나도 마스크가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디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난 2월 1일부터 5주간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쇼핑물 사기 피해가 900건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총 948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313건(33%)은 해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등으로 판매 글을 올린 판매자가 돈을 챙긴 후 연락을 끊는 전형적 사기 의심 사건이었다. 나머지 635건(67%)은 재고 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한 경우였다.

사기의심사이트(313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판매 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어를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 ▲

국내쇼핑몰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 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입금을 했음에도 입금 대기 상태로 뜨거나 택배 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이었다.

마스크 판매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SNS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 구매는 되도록 피해 달라"며 "다른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전 이용 후기를 확인해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